

「현장 진로·진학 교사 대상 대입 정책」 심포지엄

일시 2017. 4. 18(화) 18:00~20:00

장소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 310호

주관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후원 광운대학교

행사일정

- 일시 : 2017. 4. 18.(화) 18:00~20:00
- 장소 :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 310호

시간	내용
18: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및 식전 행사 ■ 개회사 이재하(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 중일고 교사)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화흥고 교사)
18:3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후보 교육공약 비교' 발제 및 토론 발제자 : 채용석(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장, 배명고 교사)
19:00~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제' 발제 및 토론 발제자 : 안연근(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 잠실여고 교사)
19:3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성취평가제' 발제 및 토론 발제자 : 정원(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사무총장, 동인천고 교사)

목 차

I.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향.....	1
II. 대선 후보 교육공약 비교와 문제점	8
III.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전형 연계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	15
IV. 부록	
1. 현장 진로·진학 교사 대상 대입 정책 설문지.....	20
2. 현장 진로·진학 교사 대상 대입 정책 설문 결과.....	23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향

- 수능은 진단 평가를 하고 대입은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자 -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 전국진학지도협회 공동대표 및 서울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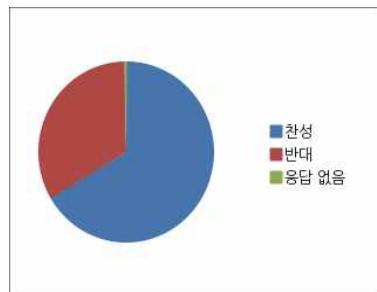
1.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절대평가로 하자.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이 예고되었다. 내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이 연계되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안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의 시험 부담 경감, 수능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수능 체제의 안정성 유지 등과 같은 미시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억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때 마침 교육과정도 개편되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수능 체제 안정적 개선보다는, 획기적인 개편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국진진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전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능 절대평가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다. 설문 조사 결과 총 774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에 찬성한다.' 비율이 66%에 달하고 있다. 응답자의 약 2/3가 수능 절대 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에 찬성한다.>



찬성	514명	66%
반대	257명	33%
응답 없음	3명	1%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음에서는(2개의 복수 응답 가능)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가 40%(311명), '사고력, 문제 해결력 중심의 수업이 확대될 수 있다.'가 25%(195명),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23%(182명)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만족도 향상 17%, 변별을 위한 기형적인 문제 출제 감소가 13% 순이었다.

이에 비해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가 가장 높은 23%(185명)이었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 일관성, 1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절대평가로 인한 학습력 저하 등을 문제 삼아 응답한 비율은 8%, 9%, 4%로 많지 않았다.¹⁾

지금까지 수능은 명목적으로는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 입시 평가 도구로서의 변별력 확보였다. 이러한 수능 체제에서 학생들은 상위 석차를 노리고 무한 경쟁을 해야만 했고, 고교 교육은 수능 시험 준비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1) 본 설문 조사에서 '응답 없음' 이 각 항목별로 유독 높게 나타난 이유는 찬성 의견은 찬성 이유, 반대 의견은 반대 이유 문항에만 답변하게 했기 때문이다. 즉 '찬성' 의견에 표시한 응답자는 반대 이유 문항은 응답하지 않고, '찬성'이유에만 응답했기 때문이다.

수능 시험으로 과연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수능 성적의 기능은 고교생이라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일종의 진단평가, 최저학력(대학 지원 자격)역할을 해야 한다. 수능 성적의 최저 학력화는 학생별·고교별 간의 학력 격차 우려를 불식해 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현재도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영역은 상대평가이다. 동일한 시험에서 영역 별 평가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모순이고, 이에 따라 입시만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상대평가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능 점수의 신화에서 탈피해야 학교 교육이 수능에 종속되지 않는다. EBS 교재 문제 풀이나 하는 죽은 교육에서 벗어나,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질문과 발표가 일상화된 살아있는 수업이 구현될 것이다.

고교 교육이 수능 상대평가에 종속되어 한 문제라도 더 맞도록 무한 경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수능의 평가 방식이 고등학생으로서 이수해야 할 학력 성취 수준을 진단하는 '절대평가'에 목표를 둘 때, 고교는 수능 시험에 짓눌리지 않고 정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한다면 대입 전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본 발표자는 수능 개편 안에서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수능 시험의 범위와 실시 시기, 둘째, 수능 영향력 약화에 따른 대입 전형 체계 개선이다.

2. 수능 시험의 범위와 실시 시기

주지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 1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표1 > 2015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와 과목 편제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출처: 교육부(2015b: 16)

이들 모든 교과목을 수능 시험으로 보는 것은 버겁다. 수능 시험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만 해도 71과목이나 된다. 이는 현행 수능 출제 과목 수보다 20과목이나 많은 것이다. 선택 과목수가 많아지면 응시 과목의 난이도 및 응시 학생의 차이로 인한 표준점수 왜곡 현상 즉,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단 하루에 일제히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과목 수'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이 문·이과 구분 체제를 개선하여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국의 고교생이 동일하게 이수하는 '공통과목' 즉, 국어·수학(공통)·영어·탐구(통합과학, 통합사회)·한국사 과목을 수능 출제 범위로 해야 한다. 이는 2013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7학년도 수능 체제 방안 중 제 3안인 문·이과 완전 융합 안이고, KEDI에서 제시한 수능 개선 방향 안 중 2안인 공통형에 해당된다.²⁾

직업 탐구와 제2외국어는 수능 시험 과목에서 빠진다. '공통과목'만해도 6개 과목이나 되어, 단 하루에 수능 시험을 치르기에는 시간적으로 버겁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 탐구와 제2외국어는 수험생들의 소수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가목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작년 수능에서 직업 탐구는 전국에서 6천273명이 응시하였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48명, 50명이 응시하는 과목도 있고, 최고 표준점수도 큰 차이가 난다. 과목 간 점수 차가 12점이나 난다.³⁾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공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기 때문에, 직탐을 굳이 수능 과목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표 2>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과목명	인원(명)	최고 표준점수	과목명	인원(명)	최고 표준점수
농업 이해	365	70	회계 원리	2,560	72
농업 기초 기술	338	71	해양의 이해	48	73
공업 일반	2,258	67	수산·해운 산업 기초	50	68
기초 제도	2,084	72	인간 발달	1,019	70
상업 경제	2,614	71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93	79

출처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7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보도자료(2016. 12.7)

현 수능에서 제2외국어 과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작년 수능에서 제2외국어는 전국에서 7만3천968명이 응시하였는데, <표3>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 99%가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를 택하고(72%)있다. 학생들이 아랍어를 택하는 이유는 아랍어가 필요하고 좋아서가 아니다.

<표 3>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과목명	인원(명)	최고 표준점수	과목명	인원(명)	최고 표준점수
독일어 I	1,255	66	러시아어 I	807	72
프랑스어 I	1,288	67	아랍어 I	52,626 (72%)	100
스페인어 I	1,263	68	베트남어 I	3,613	79
중국어 I	3,982	67	한문 I	3,147	68
일본어 I	5,987	70	합계	73,968	

출처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7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보도자료(2016. 12.7)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표준점수와 등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 수능에서 사탐 최고 표준점수는 65~68점이었다. 그러나 제2외국어는 66~100점이었는데, 100점이 아랍어이다. 과목 간 점수 차가 무려 34점이나 난다. 특히 아랍어는 올해의 경우 원점수 18점이면(50점 만점) 2등급으로, 사탐 과목 45점대에 비해(50점 만점) 훨씬 수월하게

2) ○ (1안 : 조합형) 현행과 유사 형태(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에서만 1과목 선택)

○ (2안 : 공통형) 모든 학생이 필수로 배워야 하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6개 공통과목 출제

○ (3안 : 이원화형) 수능을 I, II로 이원화하여 수능 I은 공통과목에서 출제하고, 수능II는 선택과목에서 출제. 대입전형 활용 방법은 대학 선택(수능 I만 활용, 수능 I, II 활용 등)

3) 이에 비해 사회탐구 최고 표준점수는 65(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68점(법과 정치, 경제)으로 직업 탐구에 비해 적다. 과학 탐구 최고 표준점수는 67(물리II)~72점(물리 I)이었다.

좋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 제 2외국어 점수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사탐 과목 대체를 허용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이점을 노리고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를 응시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운을 바라고 응시하는 제 2외국어는 평가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제외해도 될 것이다. 수능 대신,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

수능 시험을 고교 1학년에 편성되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2·3학년 수업 때 '공통과목'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3, 11월에 치르는 수능 시험을 고2, 4월 또는 여름 방학 후인 9월에 실시했으면 좋겠다. 재학 중인 고2때 볼 수 있고,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은 3학년 때 후배들과 함께 재차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어 재수생 문제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고1 '공통과목'만 수능 시험에 포함된다면, 고2·3학년 때 배우는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교과목은 대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수능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3학년 2학기 까지 교과 성적을 대입 전형에서 평가한다면 고교의 수업은 정상화될 것이다. (현재는 수시모집에서 3학년 1학기 까지만 학생부가 반영되어 2학기 수업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교과목을 반영할 것인가는 전공 분야 별로 미리 제시해야 학생들이 '진로선택' 과목 선택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개별 대학별로 제시하면 대학 입시가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들이 협의하여 계열별 즉, 인문/ 사회/ 상경/ 교육/ 이학/ 공학/ 의학/ 예체능 별로, 지원자가 최소 이수해야 할 과목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에서 고교간의 학력차를 우려하여 학생부 교과목을 반영하기가 주저된다면 전공 희망에 따라 미국의 SATⅡ처럼 수능 시험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들이 두 번의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융합형 수능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수능을 이원화하여 수능Ⅱ에서는 논술형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논제로 전국적으로 논술시험을 치른다면 사교육은 오히려 더 성행할 것이다. 논술 성적이 필요 없는 학생도 일단 논술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수능 성적 필요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고교생들이 수능을 의식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3.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체계를 개선

현재 수능은 평가 요소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 2017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5만2천297명이었다. 원래 수능 원서 접수자 수는 60만5천988명이었는데, 5만3천691명이 수능 시험에 결시를 한 것이다. 과연 수능 성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이 5만여 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2017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성적을 필요로 하는 수험생은 약 22만여 명 밖에 안 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필요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7만여 명, 논술 전형 1만 4천여 명,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4년제 대학 10만여 명, 전문대 3만 4천여 명 등이다. 결국 수능 응시자 55만여 명 중에서 33만 명 즉, 수능 응시자의 60%가 수능 성적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러리를 선셈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큰 낭비인 수능 시험 행사이고, 수험생들에게는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수능 원서 접수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수시모집 지원을 할 때 수능 성적도 모른 채 감감히 지원을 유도하는 현대입체계 때문이다. 수시 모집 지원이 9월에 있다 보니, 수험생들은 11월의 수능 성적도 모른 채 일단 수시 지원(최대 6회 지원 가능, 평균 4.47회 지원)부터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수

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수능 시험일 이후에 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으로 발길을 향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재수의 길을 걷는 구조이다. 수능 시험을 고교 2학년 때 실시하고, 대입 전형은 고3학년 차 년도 1월에 실시하면 이러한 모순은 해결된다.⁴⁾ 수능 성적으로 자신의 지원 자격을 알고, 이미 산출된 학생부 성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부 위주로만 선발한다면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 학생부를 망친 학생들은 어떡하란 말이나?' 라는 볼멘 목소리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이 없거나, 불리한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 N수생들도 여기에 가세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대학 진입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별고사가 그것이다. 그동안 논술, 적성,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는 억제 당했다. 사교육비 증가 주범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발생한다. 다행히 '사교육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서 논술 등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한다. 이에 따라 고교에서도 논술 등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대학별 고사는 대학 선발의 자율성을 위해서도 억제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입 전형유형은 크게 다섯 개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실기전형,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수능 중심 전형이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학

<표 4> 2017/2018 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전형유형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0,935명(54.3%)	40.0%	141,292명(56.8%)	39.7%
	학생부(종합)	83,231명(32.0%)	23.6%	72,101명(29.0%)	20.3%
	논술 위주	13,120명(5.1%)	3.7%	14,861명(6.0%)	4.2%
	실기 위주	18,466명(7.1%)	5.3%	17,942명(7.2%)	5.0%
	기타	3,921명(1.5%)	1.1%	2,473명(1.0%)	0.7%
소계		259,673명(100.0%)	73.7%	248,669명(100.0%)	69.9%
정시	수능 위주	80,311명(86.7%)	22.8%	93,643명(87.5%)	26.3%
	실기 위주	11,334명(12.2%)	3.2%	12,280명(11.5%)	3.5%
	학생부(교과)	491명(0.5%)	0.1%	437명(0.4%)	0.1%
	학생부(종합)	435명(0.5%)	0.1%	671명(0.6%)	0.2%
	기타	81명(0.1%)	0.0%	45명(0.0%)	0.0%
소계		92,652명(100.0%)	26.3%	107,076명(100.0%)	30.1%
합계		352,325명	100.0%	355,745명	100.0%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발표 보도자료(2016. 4.28)

생부 교과전형이 40%로 가장 많고, 논술전형이 3.7%로 가장 적다. 그러나 이는 전국 대학교의 단순 합산일 뿐이다. 학생들이 선호하여 우리나라 대입 전형에 영향력이 있는 10개 대학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표5>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 45%로 가장 많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았던 학생부 교과전형은 5.66%로 오히려 가장 적다.

<표5> 10개 대학 수시모집 인원과 전형유형 별 선발 비율

(정원내 기준)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시모집 선발 비율(%)	전체 모집인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대	-	-	2,660	78.5	-	-	78.0	3,345
고려대(서울)	400	10.5	2,357	62.0	-	-	84.0	3,799
서강대	-	-	873	55.4	348	22.1	80.0	1,576
성균관대	-	-	1,547	46.0	957	28.5	79.0	3,360
경희대	-	-	2,083	43.3	820	17.0	68.0	4,813

4)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만큼은 서류 검토, 면접 등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므로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

한양대(서울)	322	11.4	1,096	38.9	399	14.2	72.0	2,816
중앙대(서울)	380	11.6	1,216	37.1	836	25.5	76.0	3,277
이화여대	480	15.9	904	30.0	545	18.1	78.0	3,009
연세대(서울)	-	-	809	23.6	683	19.9	70.0	3,431
한국외국어대(서울)	179	10.6	378	22.5	450	26.7	67.0	1,683
10개 대학 전체	1,761	5.66	13,923	44.76	5,038	16.20	75.20	31,109
전국	140,935	40.0	83,231	23.6	13,120	3.7	73.7	352,325

문제는 대학 진로 경로가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중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 선호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1,2학년 학생부 관리를 못한 학생들은 3학년 때에 수능 공부에 매달리고, 정시모집 수능 중심 전형에서 졸업생과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재수를 하고...

편중된 대입 전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입 선발방법에서 중심적인 전형요소를 교과/ 종합(비교과+면접)/ 논술/ 적성/ 특기/ 수능의 6개로 하여, 수험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가진 전형요소로 준비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부 위주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강조하면, 이를 준비하지 못한 층으로부터 평가의 공정성, 준비 부담, 사교육 개입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개의 진입 경로를 골고루 열어 주고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게할 때 불만도 줄어 들 것이다.

중심 전형요소에는 적성고사도 있는데 이는 중위권 학력(學力)층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논술 대신, 객관식 적성고사를 택하여 대학 진입 경로를 열어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자격에 의미가 있는 수능 성적 역시, 중심 전형요소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학생 자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지원 자격만 갖추면 합격할 수 있는 4년제 일반대학이 약 80여개 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발표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표6>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6>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대입 전형 체제 제안

수능 범위	수능	수능	수능	수능 시험	학생부 반영 과목 및 범위	대학 별 고사	대입
공통과목 (고1)	평가 방식	문제 형식	시험 시기	시험 기능	일반 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 (고2, 3학년)	논술/적성고사, 특기 등	전형 시기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9등급 절대 평가	5지 선다형 객관식 (현행과 동일)	고2 4월 또는 고2 9월	■ 대학 지원 자격 고사 (고교간 학력 차 보완 기능) ■ 진단평가	■ 대학 계열별로 반영 (인문/ 사회/ 상경/ 교육/ 이학/ 공학/ 의학/ 예체능 별로 지원자가 최소 이 수해야 할 과목을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에서 사전에 발표) ■ 3학년 2학기 까지 전체 반영 ■ 과목별 등급 성적 반영 성취도 평가제 유보	■ 논술/적성/ 특기(어학 문 예 및 수학 과학 SW) 등 최대 선발 가능 비 율 제시 ■ 대 학 에 서 자율 채택.	■ 고 3 차 년 도 1월 초에 정시 모집 ■ 2월말 추가 모집
평가 요소	교과/ 종합(비교과+면접)/ 논술/ 적성/ 특기/ 수능의 6개						

그동안 수많은 수능 시험의 개편이 있었다. 수능 시험 개편 때마다 명분으로 내걸었던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시행착오 속에 고교 현장에 혼란만 있었다. 단적인 사례가 2014학년도에 도입된 수준별 수능이다. 영어 A/B형은 당해 연도만 시행을 하고 접었다. 그리고 올해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난다면 또

다른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제발 수험생들과 고교 현장을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1 수능 체제만큼은 이론에 밝은 몇몇 교수님과 연구원·행정가뿐만 아니라, 고교·대학 현장의 진학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수립하면 좋겠다. 수능은 평가 요소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 전형 제도와 고교의 교육과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입의 시행착오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는가.

대선 후보 교육공약 비교와 문제점

채용석

배명고 교사, 전진협 연구운영위원장

문재인	1. 고교학점제 2.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단계적 폐지) 3. 대입 전형 3개(교과, 종합, 수능)으로 단순화 4. 기회균형전형 의무화, 중소기업 근무자 대학진학 기회 확대 5. 입시 시기 일원화 6. 초중고예체능 활성화→입시 반영 유도 7. 교육부 축소→대통령산하 자문기구(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 사회적 합의 도출 8. 서울대와 국공립대 공동입학/학위제, 고교까지 의무교육, 공영형사립대
안철수	1. 학제개편(2-5-5-2) 2. 수능 자격고사화 3. 기회균형, 지역균형 비율을 확대 4. 학생부 종합전형을 발전시킨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 5.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 신설
홍준표	1. 서민 자녀에 등록금, 기숙사, 해외연수 지원 2. 누리과정 지원금 소득별 5단계 차등지급 3. 서민자녀에게 온라인수강권과 교육복지 카드 지급.
유승민	1. 학교제도의 법제화: 대입, 교육과정, 고교 유형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 법제화하여 훈령, 시행령으로 인해 수시로 바뀌지 않게 하겠다. 2. 대입제도, 교육과정, 특목고·자사고 정책 법제화하여 자의적 변경 금지 3. 수강신청제: 필수단위 이수+선택이수 4. 외고, 자사고 폐지 5. 대입전형 간소화: 논술 폐지, 학생부, 면접, 수능으로 선발 6. 중학교 자유학년제: 1년간 자유학기 7.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는 교육격차해소 등 교육복지업무 수행
심상정	1. 학급인원 20명, 토론수업, 거꾸로 교실 확대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를 확충, 50%까지 확대 3. 고졸취업 장려금 4.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를 폐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유지 5.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통해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

문재인 후보 교육공약

1. 고교학점제: 학생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 수강→비교과 활성화로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향상
 - (1) 공강시간 학생들 대기 시설 확보와 예산
 - (2) 일과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학생에 따라 등하교 시간이 달라지는 문제

- (3)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다고 비교과가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 (4)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활동(수업 등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교과 활동)으로 선발하는데 비교과 활성화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함.

학교 교육과정은 총 204단위⁵⁾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비교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며 24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음. 나머지 180단위가 교과수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비교과 활동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24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체 이수단위의 90%에 해당하는 교과활동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2. 외교,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단계적 폐지)

- (1)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 취지와 다르게 진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2) 자사고의 일반고화는 필요하다. 현재의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으로 2010년에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하지만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높은 등록금과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전단계로 사교육 유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자사고 학생들의 진학유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 영향이 높은 논술전형과 수능중심 전형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라도 자사고 정책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사교육 축소가 교육부의 목표는 아니다

3. 대입 전형 3개(교과, 종합, 수능)으로 단순화→수시 축소 정시 확대

- (1) 현재의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형태이다. 실기전형은 대부분 예체능 특기자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전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면 논술만 폐지되는 것임. 논술도 복잡한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사회의 인재 요구에 부합되는 면이 있음. 사교육 유발이라는 잣대만으로 단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 (2) 정시를 확대한다고 하였을 때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평가기간 부족으로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면 교과전형이나 수능전형을 늘리는 것인데 교과전형을 늘리는 것은 수시모집에서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정시에서는 교과 성적+수능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수능성적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됨.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교과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교과전형을 굳이 정시로 이동해서 선발할 필요가 있는지 씀.

4. 기회균형전형 의무화, 중소기업 근무자 대학진학 기회 확대

- (1) 기회균형전형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대학에서 선발 비율을 의무화 한다는 것인지 전형개설을 의무화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2) 기회균형전형의 경우 대부분 정원외 전형이고 현재 고교교육정상화 지원 사업에서는 정원내로 선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정원내 선발을 의무화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3) 기회균형 선발 인원 대부분이 정원외 선발인데 의무화하여 모집인원을 확대하는 경우 수도권 주요대로 지원자가 몰려 지방대의 경우 충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음.
- (4) 중소기업 근무자 대학진학 기회 확대는 현재에도 재직자 전형이 대학별로 개설되어 있지

5) 1단위는 1주일에 1시간의 수업시간을 의미함

만 상당수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임. 정시 퇴근이 어렵고 주말에도 근무가 있는 현실에서 평일 오후에 야간대학 수업을 듣거나 주말에 수업을 듣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시 퇴근하고 주말 근무가 없어야 하는 근무조건이 우선 되어야 가능하다.

5. 입시 시기 일원화

- (1) 12월 초에 수능을 치르고 1월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대입전형을 치르는 방안으로 생각됨. 수능이후에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수시모집과 유사한 전형과 수능성적을 활용하는 정시전형과 유사한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 경우 현재 수시 6회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원서지원을 몇 회로 제한할 것인지, 실기전형의 경우 평가일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 평가기간을 지정해줘야 하는데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할 것인지?
- (2) 긍정적인 면: 12월 초 수능 전까지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수능 미반영 전형지원으로 인한 수업 불성실 등이 감소될 수 있다.
- (3) 문제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평가기간 부족으로 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류 평가와 면접일자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동일기간에 여러 모집이 진행되므로 중복합격으로 인한 학생의 이동과 추가합격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6. 초중고예체능 활성화→입시 반영 유도

- (1)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안에 찬성함
- (2) 입시에 반영하게 되면 예체능과목에서의 과열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게 할 충분한 요인이 되어 예체능교육 활성화의 근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7. 교육부 축소→대통령산하 자문기구(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 사회적 합의 도출

8. 서울대와 국공립대 공동입학·학위제, 고교까지 의무교육, 공영형 사립대

안철수 후보 교육공약

1. 학제개편(2-5-5-2)

- (1)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직업학교⁶⁾ 2년, 대학 4년
- (2) 교육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다.
- (3) 학제 통폐합에 대한 교사 수급, 재배치,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안이 필요하다.
- (4) 중학교 5년 이후 2년간의 기간 중 직업학교는 현재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직업탐색과정 2년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년이 전문대학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현재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포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다.

2. 수능 자격고사화→학생부, 입학사정관제, 면접으로 선발. 입학사정기준을 모두 공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대학이 엄중한 책임

6) 중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희망자는 진로탐색학교로 진학해 진로탐색과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 취업을 선택한 학생은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 교육을 받게 된다.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게 되는 경우 현재의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정시모집이 사실상 폐지되게 되고,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2) 그러면 현재의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특기 전형이 남게 된다.
 - ① 학생부교과전型的 경우 학교 간 학력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상위권대학에서는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심층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OO대학에서는 면접형 전형을 신설하면서 1단계 심층(제시문) 면접, 2단계 확인면접을 실시한다.
 - ② 학생부종합전型的 경우에도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③ 학교 간 학력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학별로 학교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④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던 정시모집인원을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두 선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별고사를 신설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대학별 고사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상위 15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 (3) 면접으로 선발: 면접은 일반적으로 심층면접과 확인면접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말한 면접이 어느 유형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① 심층면접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문과 준비시간을 주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구술면접이라고도 한다. 이는 논술을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면접대비를 위한 사교육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 ② 확인 면접의 경우 학생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교육 유발요인은 없지만 서류 확인, 기록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이므로 변별력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 변별력을 갖기 위해 발표면접과 토론면접 등 다양한 종류의 면접이 실시될 수 있어 사교육 유발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 (4) 입학사정관제 기준 공개: 현재에도 다수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요소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세세한 평가요소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사교육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기회균형, 지역균형 비율을 확대

- (1) 기회균형 확대: 현재 기회균형선발은 모집인원의 일부분만 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대부분을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비율 확대가 정원 내 선발을 의미하는지 정원 외 선발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① 정원 내 선발 비율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 대학의 전체 정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형 선발인원 비율을 늘리게 되면 반대로 일반학생들의 모집인원이 축소되게 되는 역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 고교교육정상화 지원 사업에서 고른기회전형의 모집인원을 정원내로 선발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② 정원 외 선발: 정원 외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모집인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방학생 다수가 서울과 수도권 선호대학에 지원하게 되어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2) 지역균형 확대: 현재 지역균형 선발을 주요 모집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모집단위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부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모집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지역인재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부록 참조

4. 학생부 종합전형을 발전시킨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

- (1)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와 다르다. 2008년에 처음 도입되어 초창기에는 교내외 활동 중심으로 선발을 했다면 현재는 학교활동과 수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국의 입학사정관제와는 확연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는 어떤 입학사정관제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한국형입학사정관제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선거와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구호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제언

1. 두 후보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을 유지하거나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된 초기에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수, 다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그 원칙이 무너져 일괄합산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작 초기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수 다단계 선발 원칙부터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대입관련 공약에 여러 개선점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참고사항

-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 육성법, 2014.11.19. 시행) 3조
- ①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2조 ①항에는 '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3조 ①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령 9조 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에서는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

다.

-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10조(대학입학기회확대)에서는 '해당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다.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

해당 지역	범위	학생 모집 비율
가.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나.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30%
다.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라.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0%
마. 강원권	강원도	15%
바.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

가.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모집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20%

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모집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0%

3.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모집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가. 제1호의 모집 비율 $\frac{\text{모집단위별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text{모집단위별 전체 입학 인원}}$
- 나. 제2호의 모집 비율 $\frac{\text{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text{전문대학원 전체 입학 인원}}$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2014.11.19.) 5조(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지사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전형 연계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

정원

동인천고,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사무총장

1. 서론

대통령선거를 21일 앞두고 있는 현재 각 대선 캠프에서는 교육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입과 관련한 주요 의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2017년에 도입을 결정하기로 한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전형 연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대한 상대적 줄 세우기식 평가방법과 달리 개별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으로 도입 배경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⁷⁾

첫째, 교육과정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2009 교육과정 총론)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고교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보통교과를 '기본-일반-심화' 과목으로 정비하여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9등급 상대평가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석차 등급 산출에 불리한 소인수 교과목 수강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평가결과가 개별 학생의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대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상대평가 제도는 학년 내의 상대적 서열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나눔과 배려의 협동학습을 저해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셋째,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교육과정 이수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의 모체) 등 학생선발 체계가 선진화되어 학교 내신 평가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2009 교육과정의 도입과 대입전형의 선진화 등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에도 불구하고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전형 연계는 2017년까지 도입이 유예⁸⁾되었고, 2020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제 결과의 대입 반영은 2016년 하반기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성취평가제 도입 유예의 주된 이유로 '일반고 위기' 속에서 성취평가제가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하다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⁹⁾

교육부는 2015년 10월 1일 성취평가제의 대입 전형 연계를 2017년으로 또 한번 유보하였고 약속대로라면 올해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전형 연계를 결정해야 하는 2017년은 2013년 유보 결정 당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상태인가?

2. 본론

7)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11.12.13.)

8)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보도자료」, 교육부(2013.8.28.)

9) 「<대입개편> 성취평가제 대입 미반영...입시.교육과정 '충돌」, 연합뉴스 기사(2013.8.27.)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전형 연계를 결정해야 하는 올해 갑자기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져 코앞에 다가온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 상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현장은 대입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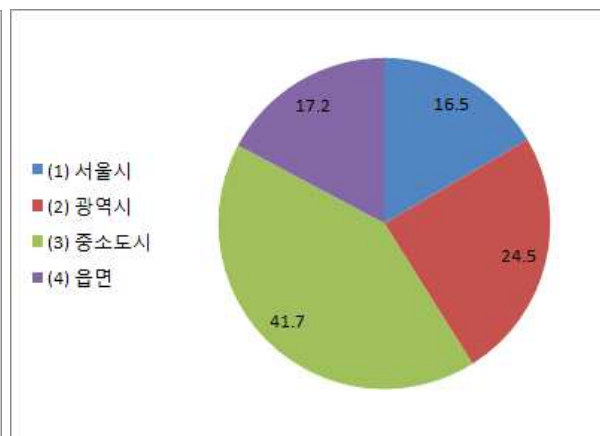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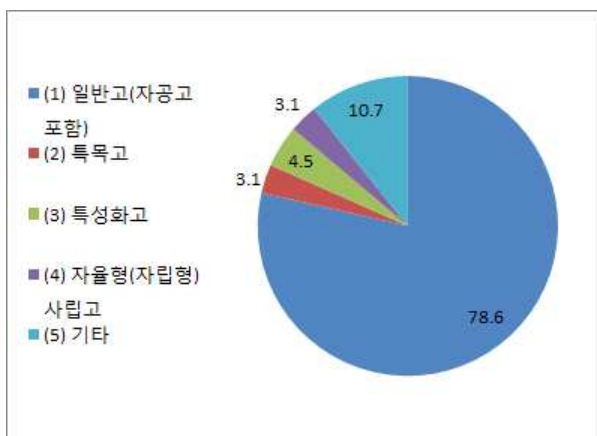
그래서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국 진로·진학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문제 중 대입과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해 긴급히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기간 2017년 4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4일간) 총 응답자는 774명이고 응답자의 재직 학교 유형은 일반고가 78.6%(표 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소재지는 중소도시가 41.7%(표 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응답자의 재직 학교 유형		
학교 유형	응답 수	비율
(1) 일반고(자공고 포함)	608	78.6
(2) 특목고	24	3.1
(3) 특성화고	35	4.5
(4) 자율형(자립형) 사립고	24	3.1
(5) 기타	83	10.7
합계	774	100

<표 2>

응답자의 재직 학교 소재지		
학교 소재지	응답 수	비율
(1) 서울시	128	16.5
(2) 광역시	190	24.5
(3) 중소도시	323	41.7
(4) 읍면	133	17.2
합계	77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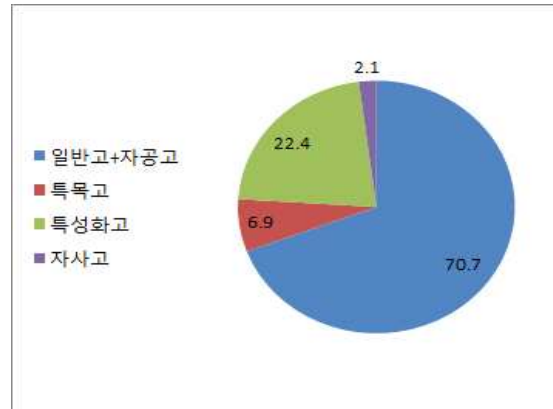
2016학년도 기준 전국 고등학교 설립별 학교 비율(표 3)¹⁰⁾과 비교할 때 특성화고 교사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일반고 비율이 70.5%이므로 대입과 관련한 통계 자료로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소재지별 응답자 비율은 통계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교하지 않았다.

전국 774명의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에게 “고교 성취평가제에 찬성한다”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은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찬성과 반대가 절반으로 나뉘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나친 경쟁 완화’(28%)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27.5%)를 들었고, ‘학생들의 성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가 그 뒤를 따랐다.(표 5) 줄 세우기 식의 상대적 평가방법보다는 숨막히는

10)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2016년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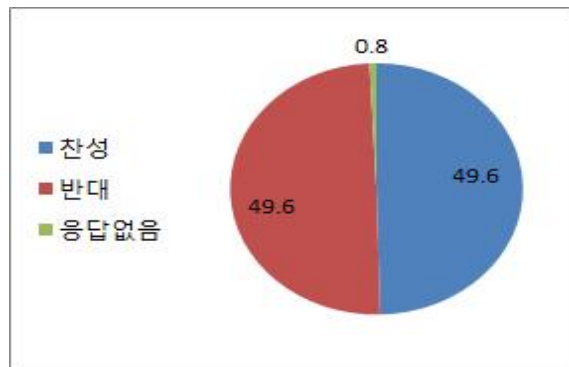
전국 고등학교 설립별 학교 비율		
학교 유형	응답 수	비율
(1) 일반고(자공고 포함)	1,568	70.7
(2) 특목고	152	6.9
(3) 특성화고	497	22.4
(4) 자율형(자립형) 사립고	46	2.1
합계	2,217	100



무한 경쟁을 없애고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국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성취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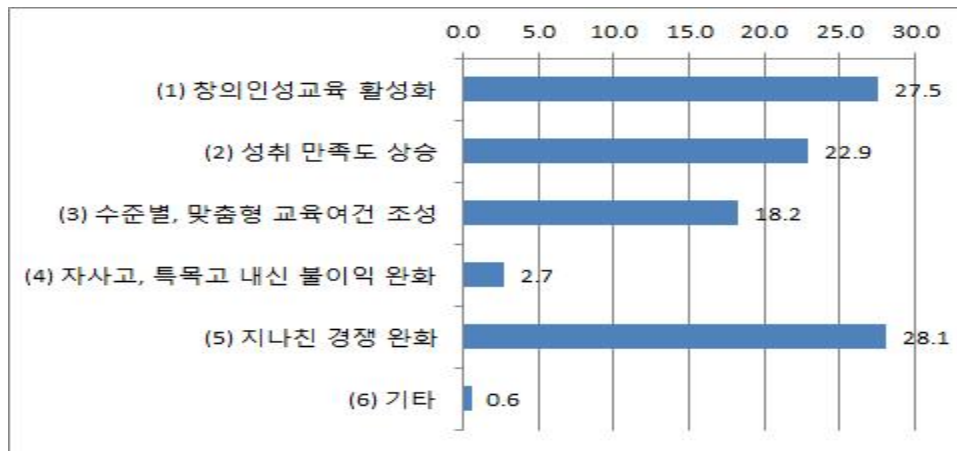
<표 4>

고교 성취평가제 찬반 비율		
구분	응답 수	비율
(1) 찬성	384	49.6
(2) 반대	384	49.6
(3) 응답 없음	6	0.8
합계	774	100



<표 5>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구분	응답 수	비율
(1)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190	27.5
(2) 학생들의 성취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158	22.9
(3) 수준별, 맞춤형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126	18.2
(4) 자사고, 특목고의 내신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19	2.7
(5) 상대평가의 문제점인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194	28.1
(6) 기타	4	0.6
합계	6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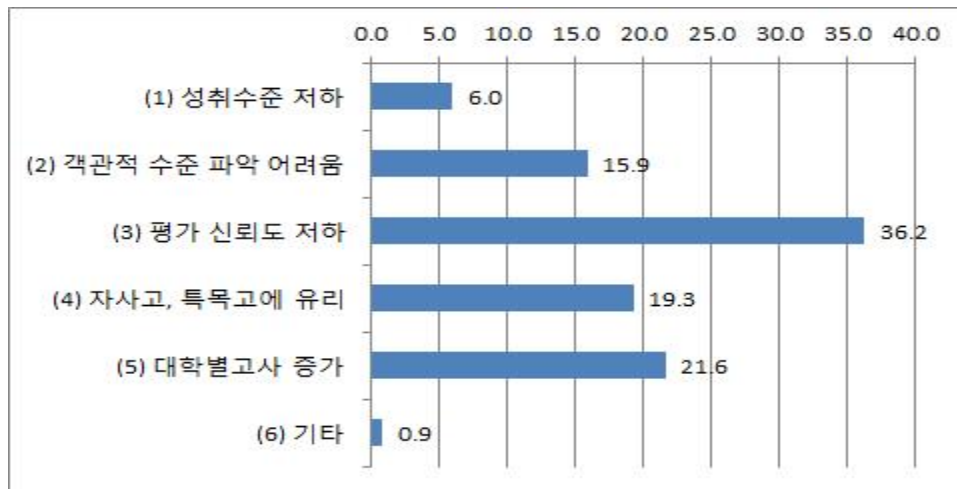
고교 성취평가제에 반대하는 이유(표 6)로 '성취동기가 줄어 성취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6%)거나 '집단 내 객관적인 학생의 수준 파악이 어려워진다'(15.9%) 등의 답변은 비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성적 부풀리기 발생으로 평가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가 36.2%로 나타나고 '대학별 고사의 증가'(21.6%)와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19.3%)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볼 때 성취평가제가 고교 현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현재의 대입제도에서 대입과 연계될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수시합격자 2,434명 중 학교 수로는 70.7%(표 3)를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4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¹¹⁾ 이런 상황에서 수능이 절대평가화되고 내신마저 절대평가화된다면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해질 것이고, 대학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증가하고 난이도도 어려워질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

<표 6>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구 분	응답 수	비율
(1) 성취동기가 줄어 성취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41	6.0
(2) 집단 내 객관적인 학생의 수준 파악이 어려워진다.	108	15.9
(3) 성적 부풀리기 발생으로 평가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다.	246	36.2
(4)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이 유리해져 자사고, 특목고 진학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131	19.3
(5) 수능 절대평가에 내신마저 절대평가를 하면, 반작용으로 대학별고사가 증가할 것이다.	147	21.6
(6) 기타	6	0.9
합계	679	100

11) 2016년 12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



3. 결론

단 4일 동안 전국 진로·진학 담당교사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진로와 진학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된 새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성취평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너무 성급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유예하거나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그간 내신에서 일반고에 비해 불리했던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대선 후보들도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목고는 몰라도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소위 소수 금수저들을 위한 귀족학교로 불리는 자사고를 대폭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고 일반고를 정상화한 후에 성취평가제를 대입 전형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할 때 대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사교육 유발요인이 커져서 교육제도를 선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다. 대학에서 내신 9등급제 평가에서 고교 성취평가제 평가로 전환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성취평가제를 대입 전형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 록

「현장 진로·진학 교사 대상 대입 정책」 설문지

본 설문은 대입 정책에 대한 현장 진로·진학 교사의 의견을 듣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대입정책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 8문항에 1분이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주변 고교 선생님들에게도 본 설문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9.

전국진학지도협의회 /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1.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일반고(자공고 포함) ② 특목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형(자립형) 사립고 ⑤ 기타

2.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의 소재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서울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

다음 문항들은 대입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찬성 의견은 찬성 이유, 반대 의견은 반대 이유 문항에만 답변해 주세요.

2. 각 이유에 대해 무순위로 2개 이내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1개~2개까지 응답 가능)

문 항	찬성	반대
1. 수시 모집 축소, 정시 모집 확대에 찬성한다.	①	②

1-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다.
 ② 대입은 정시 한 번으로 충분하다.
 ③ 수시 모집 비율이 현재도 매우 높다.
 ④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
 ⑤ 수시 모집 전형 대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기타:)

1-2: 찬성한다면, 정시 모집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학생부 교과 전형
 ② 학생부 종합 전형
 ③ 대학별고사 전형(논술/적성)
 ④ 실기 위주 전형(실기/특기)
 ⑤ 수능 위주 전형
 (기타:)

1-3: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수능 위주 전형이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다.
 - ② 수능 위주 전형은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이다.
 - ③ 수능 위주 전형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는다.
 - ④ 수시 모집 전형들이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 ⑤ 수시 모집 전형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를 잡았으므로 현행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 (기타:)

1-4: 반대한다면, 수시 모집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학생부 교과 전형
- ② 학생부 종합 전형
- ③ 대학별고사 전형(논술)
- ④ 대학별고사 전형(적성)
- ⑤ 실기 위주 전형(실기/특기)

(기타:)

문 항	찬성	반대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에 찬성한다.	①	②

2-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 ② 학생들의 성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③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기형적인 고난도 문항 출제가 감소할 것이다.
- ⑤ 사고력, 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이 확대될 수 있다.

(기타:)

2-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
- ② 수능 시험 난이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없다.
- ③ 1등급을 얻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 ④ 절대평가로 학습시간이 줄어 실력이 저하될 것이다.
- ⑤ 실수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기타:)

문 항	찬성	반대
3. 고교 성취 평가제에 찬성한다.	①	②

3-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 ② 학생들의 성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③ 수준별, 맞춤형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 ④ 자사고, 특목고의 내신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 ⑤ 상대평가의 문제점인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3-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성취동기가 줄어 성취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 ② 집단 내 객관적인 학생의 수준 파악이 어려워진다.
- ③ 성적 부풀리기 발생으로 평가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다.
- ④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이 유리해져 자사고, 특목고 진학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⑤ 수능 절대평가에 내신마저 절대평가를 하면, 반작용으로 대학별고사가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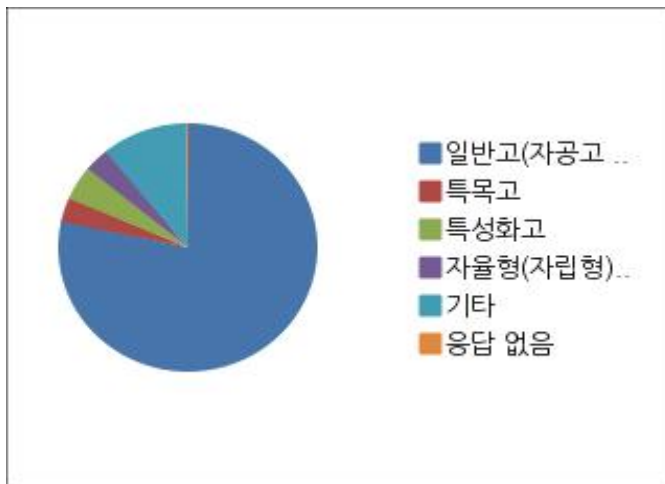
(기타:)

「현장 진로·진학 교사 대상 대입 정책」 설문 결과

- 774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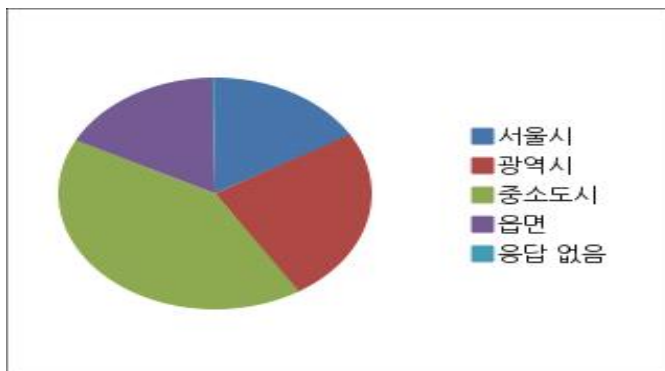
1.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일반고(자공고 포함)	608	78%
특목고	24	3%
특성화고	35	4%
자율형(자립형) 사립고	24	3%
기타	83	10%
응답 없음	2	0%



2.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의 소재지를 선택해 주세요.

서울시	128	16%
광역시	190	24%
중소도시	323	41%
읍면	133	17%
응답 없음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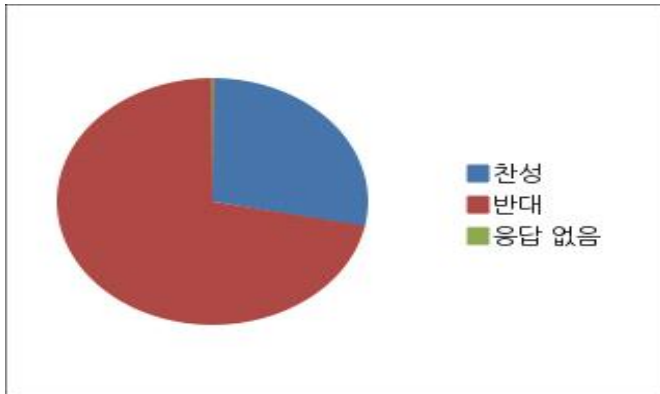


※ 다음 문항들은 대입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찬성 의견은 찬성 이유, 반대 의견은 반대 이유 문항에만 답변해 주세요. 2. 각 이유에 대해 무순위로 2개 이내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1개~2개까지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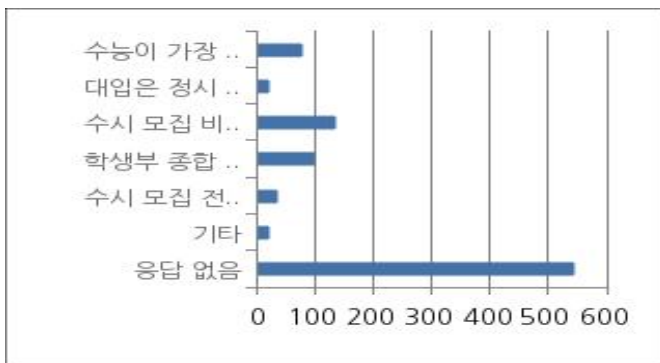
1. 수시 모집 축소, 정시 모집 확대에 찬성한다.

찬성	218	28%
반대	555	71%
응답 없음	1	0%



1-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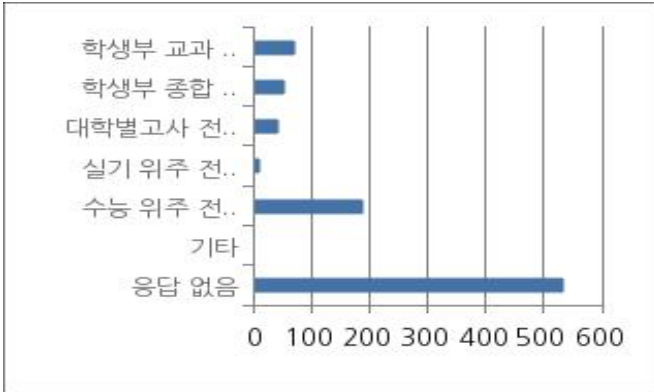
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다.	75	9%
대입은 정시 한 번으로 충분하다.	20	2%
수시 모집 비율이 현재도 매우 높다.	132	17%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	97	12%
수시 모집 전형 대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34	4%
기타	20	2%
응답 없음	541	69%



1-2. 찬성한다면, 정시 모집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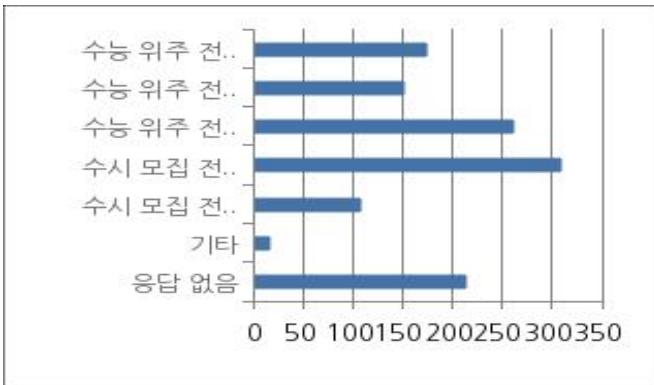
학생부 교과 전형	68	8%
학생부 종합 전형	53	6%

대학별고사 전형(논술/적성)	41	5%
실기 위주 전형(실기/특기)	8	1%
수능 위주 전형	185	23%
기타	1	0%
응답 없음	531	68%



1-3.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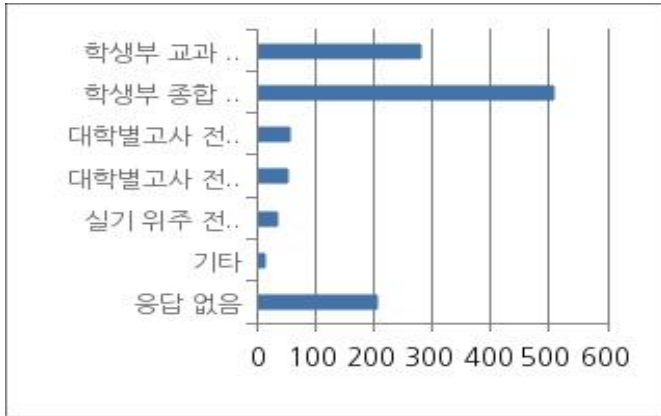
수능 위주 전형이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다.	172	22%
수능 위주 전형은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이다.	151	19%
수능 위주 전형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는다.	259	33%
수시 모집 전형들이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308	39%
수시 모집 전형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를 잡았으므로 현행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107	13%
기타	16	2%
응답 없음	212	27%



1-4. 반대한다면, 수시 모집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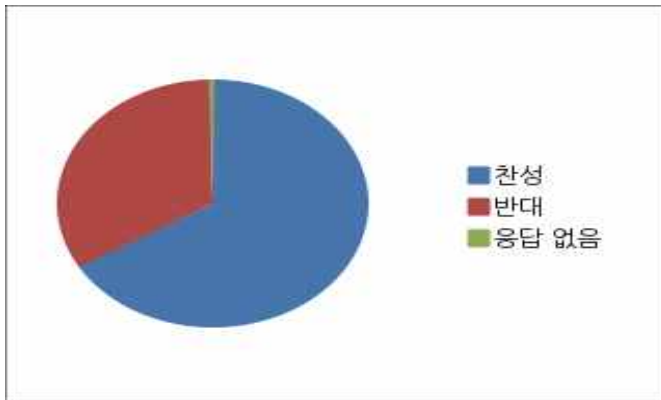
학생부 교과 전형	278	35%
학생부 종합 전형	505	65%
대학별고사 전형(논술)	55	7%
대학별고사 전형(적성)	53	6%
실기 위주 전형(실기/특기)	35	4%
기타	13	1%

응답 없음 20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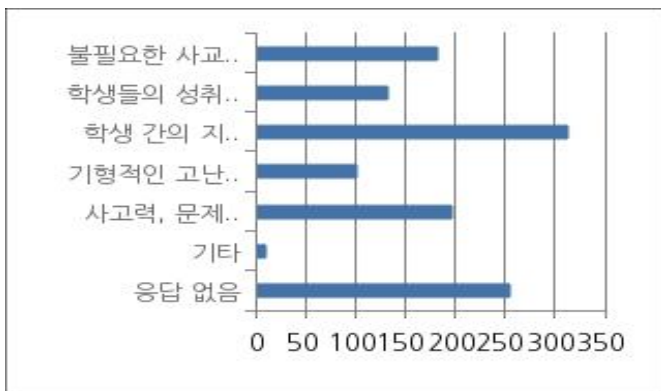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에 찬성한다.

찬성	514	66%
반대	257	33%
응답 없음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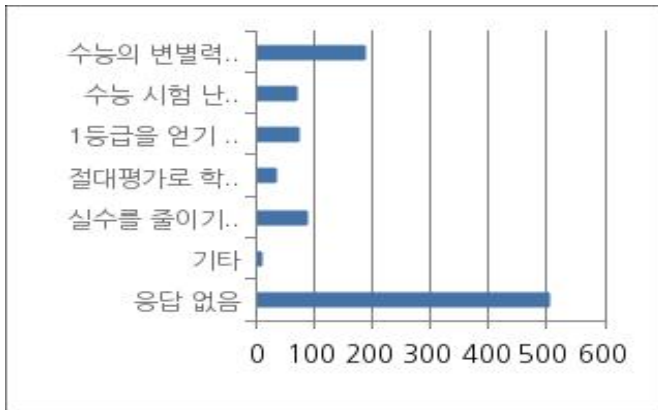
2-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182	23%
학생들의 성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132	17%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311	40%
기형적인 고난도 문항 출제가 감소할 것이다.	101	13%
사고력, 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이 확대될 수 있다.	195	25%
기타	9	1%
응답 없음	25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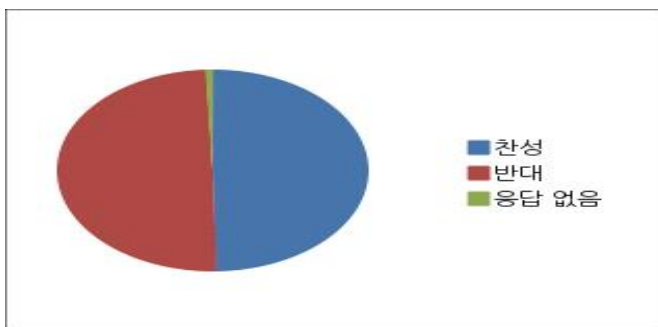
2-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	185	23%
수능 시험 난이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없다.	69	8%
1등급을 얻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73	9%
절대평가로 학습시간이 줄어 실력이 저하될 것이다.	35	4%
실수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86	11%
기타	9	1%
응답 없음	50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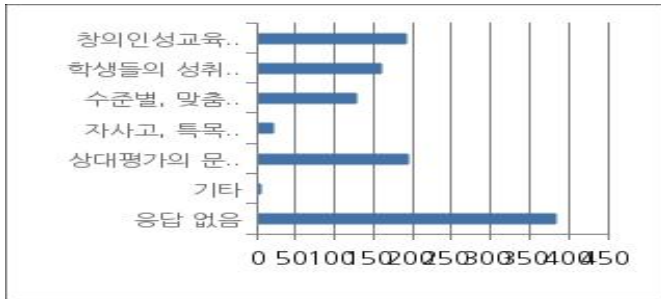
3. 고교 성취 평가제에 찬성한다.

찬성	384	49%
반대	384	49%
응답 없음	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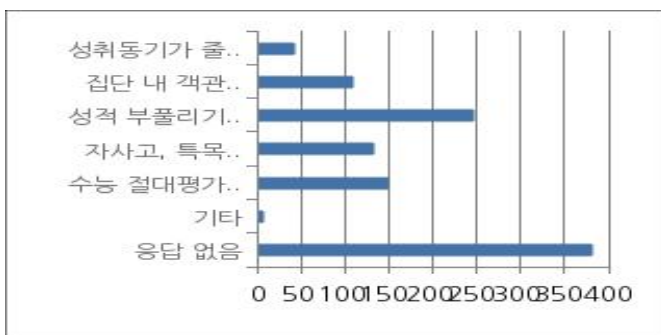
3-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190	24%
학생들의 성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158	20%
수준별, 맞춤형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126	16%
자사고, 특목고의 내신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19	2%
상대평가의 문제점인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194	25%
기타	4	0%
응답 없음	381	49%



3-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성취동기가 줄어 성취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41	5%
집단 내 객관적인 학생의 수준 파악이 어려워진다.	108	13%
성적 부풀리기 발생으로 평가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다.	246	31%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이 유리해져 자사고, 특목고 진학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131	16%
수능 절대평가에 내신마저 절대평가를 하면, 반작용으로 대학별고사가 증가할 것이다.	147	18%
기타	6	0%
응답 없음	379	48%



기획 및 제작위원

- 이재하**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 중일고 교사
박정근 |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화홍고 교사
김재호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사무국장, 영락고 교사
최승후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문산고 교사

집필위원

- 채용석**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장, 배명고 교사
안연근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 잠실여고 교사
정 원 |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사무총장, 동인천고 교사